

고교 학폭 심의건수 28% 급증 ‘학폭 가해이력’ 대입반영 영향

고등학교 2380곳 대상 조사
작년 학폭심의 7446건 집계

경기·인천 증가율 43%, 최다
서울권 27%, 지방권 19% ↑

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반영됨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사소한 사건도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2380개 고등학교 대상 2023~2024년 최근 2년간 학폭 심의 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834건)보다 1612건(27.6%) 급증한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의 학폭 심의 건수 증가율이 42.9%(812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권 26.8%(185건), 지방권 18.9%(615건) 순이었다.

고교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일반고 심의 건수가 48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3493건) 대비 40.1% 증가한

수치다.

이어 외국어고가 전년 51건에서 60건으로 17.6% 증가했고, 지역단위자사고가 전년 64건에서 65건으로 1.6% 늘었다. 과학고도 2024년 심의 건수가 31건으로 전년(15건)대비 106.7% 증가했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24건에서 16건으로 33.3%, 국제고는 12건에서 6건으로 50% 감소했고, 체육고도 36건에서 27건으로 25% 줄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총 실제 처분 건수는 총 1만 2975건이었다. 이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져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서면 사과(19.6%) ▲학교 봉사(18.8%)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출석정지 5.7% ▲학급교체 1.3% ▲전학 2.3% ▲퇴학처분 0.3% 순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서울대는 학폭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 처분 수준별로 감점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서면사와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한다. 중앙대는 전형에 따라 ‘최대 100점 감점’이나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 대부분에서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폭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이 오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아 대상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보고 또 보고’를 운영한다. 2024년 문화예술공연 모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유아 문화·예술 공연 운영

9일부터 ‘보고 또 보고’ 프로그램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고문영)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관장 김진승)은 오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보고 또 보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 또 보고’는 공연 관람과 도서관 체험을 연계해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독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및 유아특수학교, 아동양육시설 3~5세

어린이 총 220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공연 관람과 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이용 OX 퀴즈 게임 및 책놀이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유아기 문화·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샌드·예술 체험 교육 및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고문영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기회를 통해 유아들이 즐겁고 의미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도시 AI연구 본격 착수

MIT·KAIST인공지능 연구원 협력
도시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 과제 2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김만기)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지능 연구원과 함께 서울시 정책 수요 기반의 AI 공동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4월 서울시 정책 AI 접목 연구를 추진하고자 연구기관 공개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MIT와 KAIST 인공지능 연구원을 최종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AI 기술력은 물론, 도시정책과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서울형 연구에 최

적화된 파트너로 평가받았다.

공동연구의 주요 과제는 ▲Visual AI 기반 ‘체감형 도시 생태 네트워크 구축’ ▲탄소·대기·열 환경정보 기반 ‘지역경제 반응 예측 및 기후 민감지도 개발’ 등 2건이다.

‘Visual AI 기반 도시 생태 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서울시의 단절된 녹지 공간을 시각 AI 기술로 분석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입체적 녹지 정책을 설계하는 연구다.

‘기후 반응 민감지도 개발’ 과제는 기상 이변에 따른 유동 인구 및 소상공인 매출 변화 등을 AI로 예측하고, 이를 통해 기후 취약 지역을 사전에 식별

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며, 중간성과 발표는 9월 스마트라이프워크(SLW) 행사와 연계해 추진된다.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성과 공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정책 및 후속 연구 기획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본 연구를 통해 글로벌 연구기관의 AI 기술을 국내 정책 환경에 접목·실증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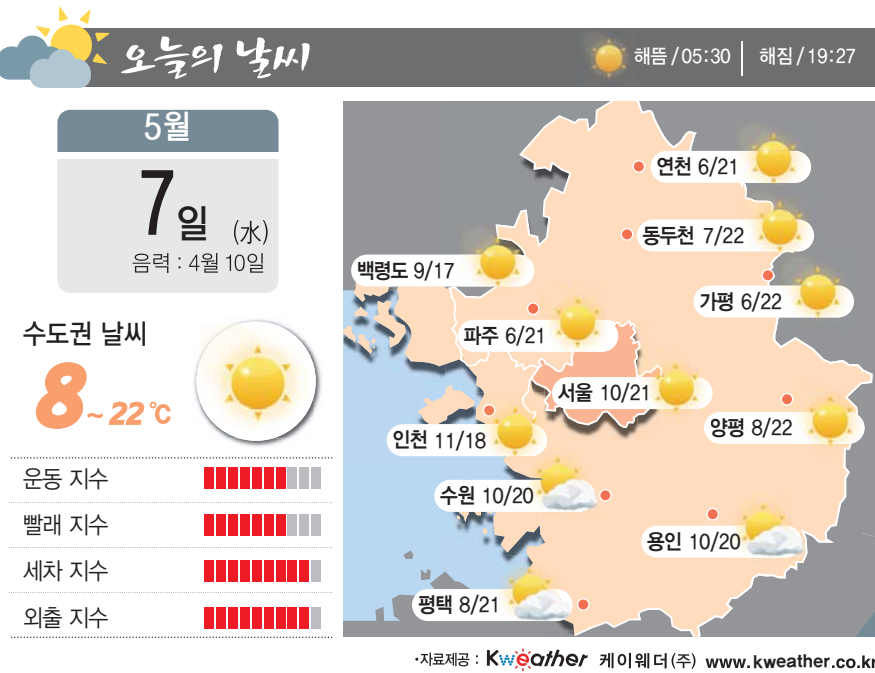
오늘부터 3주간 실시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헤그세스 美 국방장관, 미군 4성 장성 20% 감축 지시”
/사진 뉴시스
▲APEC 교육장관회의의 13~15일 제주서 개최… AI교과서 소개

▲“사람 향해 뱀다 공격”…中 휴머노이드 로봇, 또 ‘난동’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오늘 신규 원전 체결 위해 체코행

▲日 오사카 숙박비 급등…‘1박 20만원’ 캡슐호텔도 등장
▲택시가 구급차 막아 결국 응급환자 사망…泰 발각